

노무현 후보 부산 정책 연구소 초청 말씀 및 답변 내용

일시 : 2002년 11월 2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장소 : 부산 크라운 호텔

참석자 : 여성여성단체 대표자 70명

<말 씬 요 지>

부산의 여성지도자분들과 만나서 마음이 푸근하고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풀리겠다는 생각이 드니 기쁘다.

오늘 세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첫째는 여성문제가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이고 둘째 부산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셋째는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차원에서 정치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겠다.

여성문제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이자리에서 하지는 않겠으며 요즈음 생점화가 되어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다.

육아와 보육의 문제,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 향상과 관련되는 호주제 문제, 성매매와 성폭력에 대해서, 그리고 정치영역과 고위공직자 진출에 있어서 여성의 진출 보장에 관해 말씀을 드리겠다.

보육은 개인의 문제이면서 국가의 문제다. 이 노무현이가 아이들은 다 키워주겠다. 현재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사회가 붕괴될 수도 있는 국가적 문제다. 출산율이 저하되는 이유는 다른 문화적인 요인도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보육의 고통 부담 때문으로 진단한다. 보육 문제를 국가적 문제로 풀어내겠다.

경제 성장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인력 공급의 감소 때문이다. 이는 국가적 관점에서 여성 인력이 사회활동을 해야 경제 성장도 버틸

수 있다.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50만개의 여성 일자리를 만들어서 사회진출하면 0.9% 잠재 성장률을 가져온다는 개념을 가지고 여성문제를 접근할 수 있겠다. 물론 아이가 제일 중요하지만 보육문제는 이제 여성의 문제로 접근해서 국가적으로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국가가 보육지의 50%를 지원할 것이다. 현재 보육재정이 4800억원인데 1조 2천억원의 추가 재원이 들지만 가장 중요한 곳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며 1,2,3등급으로 나누어서 보육비를 지원하겠다. 사실 야박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50만 일자리를 만들면 그 부가가치가 10조 이상이며 이에 따라 증대되는 세수가 2조 원이므로 보육에 대한 국가적 재정의 투자는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쟁력의 강화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온다. 그리고 영아와 장애아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할 것이다.

호주제는 폐지되어야 하며 친양자제도도 채택하겠다.

성매매와 폭력의 문제도 남아 있다.

정치영역에서 여성의 진출은 중대선거구제 채택되어야 지역구 할당제가 용이하다. 여성단체에서 여성의 지역구 할당제를 위해서라도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해 주셔야 한다. 지역구에서 30%, 비례대표직에 50% 여성을 배정하겠다. 정부고위직에 30% 할당은 현재 5% 밖에 안되는 상황에서는 공염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5급이상 관리직에 우선 20%를 할당하여 저변을 확대하는 정책을 펴가겠다.

여성문제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 진보적 사회운동과 진보를 추구하는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여성운동에 대해서 냉담하지 않으나 여성운동하는 사람들은 간혹 약자와 소외된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냉담한 경우가 있다. 여성운동하는 사람들도 평등의 문제, 노동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서민의 지위 향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

나도 낡은 시대의 습관은 완전히 버리지 못하는 점이 있으나 노력

하고 있다.

지도력 관련해서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공적 영역에서 수직적이며 지배 명령에 익숙한 지도자상을 극복할 수 있으며 수평적, 협력적 연대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연대사회를 위한 후보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부산에 한정된 사업 공약은 근본적으로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먼저 동북아 시대가 열려야 한국이 살길이며 부산이 좋아진다. 남북 대화가 되어야 화해와 평화 협력의 해결책이 나온다. 가장 평화주의적, 탈냉전적, 화해 평화를 지향하는 후보는 나 분이다. 내가 잘되면 부산이 잘된다. 지방화 시대는 일어나야 발전의 한계에 봉착한 서울의 문제를 풀 수 있다. 서울은 살을 빼고 지방은 발전되어야 한다. 분권, 자치권을 확대하고 대학을 육성하여 지식기반을 확장시켜야한다. 고급 공무원이 모두 서울에서 일하고 저녁에도 서울에서 관계와 인맥을 형성해나가면 중앙집권적인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서울에서 떼어내야 부패와 유착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지방의 문제를 이해해야 지방을 위한 정책이 나온다. 국가 공간 형성의 재편은 국가의 개조다.

나는 93년부터 분권운동을 해온 사람이다.

소위 3김문화에 관한 이야기다.

사람을 미워하면 안된다. 과거 지도자에게 공과가 다 있다. 이제 국민을 괴롭혀 왔던 정치 문화를 미워하면 된다. 권위주의 지역주의, 이해관계에 따른 이합집산의 정치, 가신 측근 정치, 고통의 정치문화를 청산해야 한다. 나는 낡은 정치 문화를 청산하려고 한다. 낡은 정치 행태를 반복하는 사람에게 정권을 맡기면 안된다. 국민이 새 정치를 선택하고 정치 생명을 걸고 맞서서 싸워 온 사람이 새정치를 만들 수 있다. 저 사람이 정치 지도자라는 것에 대해서 부꾸러워하는 지도자를 더 이상 뽑아서는 안된다. 이제 몇몇한 정치 지도

자의 시대로 가자.

<질의 응답>

- 할당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부탁을 한다. 여성계가 중대 선거구제를 운동해 달라. 소 선거구제에서도 못하라는 법은 없지만 정치적인 역량이 작은 집단을 위해서는 중대선거구제가 좋다.

- 광역시 부시장을 여성에게 할당하는 문제는 법적으로 우선 정무 부시장의 자리를 늘려야 할 것이다.

작은 정부의 논리보다 효율적인 정부가 중요하다고 보면 할일은 하자는 주의다.

- 청소년의 인성정책을 중요하다. 청소년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 아울러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보니까 아이들은 여러군데서 많이 배운다. 집보다는 학교에서 학교보다는 친구로부터, 친구보다는 사회에서 보다 많이 배우는 것 같다.

- 학벌주의 사회는 정정당당하게 승복하는 사회가 아니라 뒷거래, 반칙사회의 유혹이 많은 사회가 된다. 아이들도 그렇게 된다. 한국의 도덕적 문화를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 노인이 조기 퇴직하고 정년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하며 노인의 일자리와 노인건강을 돌봐주는 일이 중요하다. 치매는 가족의 문제이고 결국 여성을 생지옥으로 내몰기 때문에 여성문제이기도 하다. 한 개인의 가족이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가 뒷받침해야 한다.

- 학교 급식은 우리 농산물 중심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관계법을 개정하겠다. 정부주도로 개정하겠다.

- 여성의 비정규직 문제는 근로자 파견법이 있어서 특수 직종으로 되며 대법원 판례도 노동자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다. 비정규직이 많으며 근로기준법 및 각종 보장제도가 취약하므로 근로 감독을 강화하겠다. 대기업의 노동보호책이 강하므로 중소기업이 정규직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으며 비정규직의 특수직종 판정 대법원 판례가 수정되도록 사회적인 공론을 형성해서 입법을 시도하도록 하겠다.

- 여성 고용문제는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서비스 산업, 전문적 지식 기반 사회로 가야 하며 고학력 사회는 여성 일자리를 고학력 사회, 여성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다. 복지 서비스 부문에서 확충되어야 한다.

- 교육 문화 의원 영역 서비스 확충은 여성의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분야이므로 일자리를 늘리겠다.

- 통일 평화 대북 강정책- 미국이 무력제재하면 그날로 한국이 폭력 사태로 들어가며 한국의 경제가 대 혼란이 온다.

- 1994년 전쟁 돌발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다면 미군 5만, 한국은 수백만명이 죽었고 전비는 1천억 불, 세계경제 손실은 1조달러 정도로 추정되었다. 머릿끝이 쭈뼛한 얘기다. 강경정책에 반대해 달라. 73년 아이 낳았을 때 집사람이 전쟁 나냐고 자꾸 물어보았다. 젓이 만나서 우유 먹이는데 전쟁나면 우유를 어디서 사냐는게 가장 큰 걱정이었다. 가장 잔인한 피해자는 여성과 아이들이다. 화냥년이라는 말이 바로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다. 유고슬로바키아를 봐도 그렇다.

대북 온건책은 비용이 많이 들고 댓가가 들어가지만 강경책은 겁주어서 상대를 굴복가능하게 하는 외교정책으로 돈이 앓들지만 판이 깨지면 패가망신하고 남는게 없는거다. 지금 북한도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지간 하면 타협이 성립된다. 모험주의 발상은 위험하다.

경제도 끊고 금강산 관광도 그만두면 어찌자는 건가. 조금 비싼게
뒤아가면 싸게 치는거다.

- 서울지상파방송 위성을 통해 송신되면 지방방송국이 위협을 받는다. 지방 뉴스, 문화, 방송이 모두 타격을 받으므로 부산의 시민운동이 지방매체를 살려야 한다.

- 부산 터널 문제

재검토가 옳다. 부산 시 입장은 단호한 여론을 형성해서 재검토를 이끌어 내야한다. 모든 정책 결정과정에서 시민과 토론, 조사 연구하는 프로세스가 없다. 사기업, 국가 모든곳에서 프로세스를 중요시해야 한다.

- 민간단체지원

민간단체의 인건비 지원은 자율성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약이 독이 될 수 있다.

오히려 시드머니(seed money) 차원에서 지원하여 민간단체의 자생력을 향상시키는게 중요하다.

민간단체의 강화는 국가적인 프로그램으로 발전 전략으로 중요하다.